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77
----------	------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조은희 · 이성권 · 박정하
이달희 · 이만희 · 김상욱
정동만 · 김용태 · 신성범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정·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제출처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8조).

나.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다.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 및 정부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라.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한 공공데이터 목록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마.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목록을 제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대상과 사유 등 주요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사.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 (안 제26조의2).

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함(안 제30조의2).

차.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주체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당사자”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32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활성화를”을 “활성화와 공공의 이익을”로, “관련 서비스를”을 “데이터를 생성·취득하거나 관련 서비스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을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요건”을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조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제공목록 제외 대상과 주요 사유를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된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점개방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품질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의 적절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이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2.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3. 공공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인증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절차·심사방법·유효기간 등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가명처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을 “분쟁조정위원회는”으로, “공공기관에 자료”를 “당사자에게 자료”로,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를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 중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따른”으로,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을 “사건의 조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은”을 “당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당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를 “당사자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쟁조정 사실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 ----- ----- ----- ----- ---- <u>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u>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u>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②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신 설>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공공데이터 제공·이용

	<p><u>저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 는 개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공데 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 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 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여 야 한다.</u></p> <p><u>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 고할 수 있다.</u></p> <p><u>③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 요인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u></p>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 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제15조(민간협력) ① ----- ----- 활성화와 공공의 이익을 -----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 데이터를
생성·취득하거나 관련 서비스
를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을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삭 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조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

----- 이용조
건 -----
누리집을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제공목록 제외 대상과 주요 사유를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소관 공공기

<신 설>

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된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점개방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품질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이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신 설>

<신 설>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2.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3. 공공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인증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절차·심사방법·유효기간 등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가명처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

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

----- 당사자에게 자료-----

----- 위한 -----

-----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따른 -----
----- 사건의 조정-----
----- 당사자는 -----

-----.

④ -----
-- 당사자-----

<u>담당자</u> 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u>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u>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 -- <u>당사자로</u> -----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